

文, 유엔연설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국제사회 협력 촉구

남·북·미·중, 실질적 선언 제안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대화·협력”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규정하듯, 문 대통령이 올해 6·25 전쟁 당사자(남·북·미·중)에 실질적인 선언까지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6·25 전쟁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이 종전선언해야 하는 이유로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해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

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에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 체 참여 등을 촉구하며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갈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된 것은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며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최 세션에서 “모든 세대는 국적과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 뒤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언급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코로나 위기 극복(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 이행,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담당) ▲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 차원의 ‘한국판 뉴딜’ 경험 공유 및 그린·디지털·보건분야 중심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기후 위기 대응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및 관련 경험 공유 등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상황을 두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한국에서 주최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에서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오는 2024~2025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도 예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다”며 “인류가 하나가 돼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文, 하와이서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

편치볼 국립묘지 찾아 헌화
해외서 유공자 훈장 추서 ‘최초’



문재인 대통령이 그룹 BTS(방탄소년단)와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발했다. 호놀룰루에서 문 대통령은 편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독립유공자 추서식에 이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전용기(공군 1호기)를 타고 하와이로 향했다. 이날 밤 하카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호놀룰루에서 첫 일정은 제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이 잠든 편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는 것이다. 헌화를 마친 문 대통령은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하와이 이민세대인 고 김노디 지사와 고 안정송 지사에 대한 훈장 추서식도 거행한다. 해외에서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추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호놀룰루 하카 공군기지에서 열린 ‘한·미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상호 인수식’에 함께한다. 유해 상호 인수식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 23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문 대통령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받은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도 직접 거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후 20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첫 일정은 지난 20일 유엔총회 특별 행사인 SDG Mom

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최 세션에 참석한 것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포용적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공존의 지혜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인 방탄소년단(BTS)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영국·슬로베니아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도 가졌다. 당시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확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지지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지난 21일에는 알버트 볼라 화이자 회장을 접견한 뒤 한미 백신협약 체결 현장에 함께했다. 이어 한·베트남 정상회담, 유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했다. ABC 방송과 인터뷰에는 BTS도 함께했다. 인터뷰는 24일 오전 ‘굿모닝 아메리카’, 같은 날 오후 ‘굿모닝 아메리카 3’, 25일 새벽 ‘나이트라인’ 등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하와이로 떠나기 위해 공군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총회 의제인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급부상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노력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6·25 전쟁 당사자(한국, 북한, 미국, 중국)에 실질적인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최영훈 기자

남북 개방·소통 증대… 평화통일기반 조성

윤석열, 외교·안보 11개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외교·안보 분야 11개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행사에서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위해 ▲관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남북 간 문화 교류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평화와 뉴프런티어 분야(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에서 협력을 위해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정례화 및 외교·경제 장관 2+2 회담 출범을 검토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에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한중관계에서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전 총장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 6개월에 1회(연 2회)로 정례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부장 간 대화 수시 개최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선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한일 지소미아(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해결 추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발표한 주요 안보 공약은 ▲총리실 직속 ‘신홍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안보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배치(2030년→2026년),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의식주 개선·자기계발 기회 확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당 체계 마련)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엔 김성환 전 외교부 차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